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할 것”

성경찬 도의회 민주 원내대표 “전북형 뉴딜 제3금융중심지 지정·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등 전북 주요 현안 해결 위해 소통·협력할 것”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경찬 원내대표(행정자치위원회, 고창군1)는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제3금융중심지 지정, 수소시범도시 조성,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 의원들과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경찬 대표는 “지난 2020년은 코로



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친 한해였지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특별재난지역 확대, 군산공항 운항 개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해이기도 했다”며 “모든 도민들께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신 덕택이라고” 말했다. 또, 성 원내대표는 “주민자치회법,

지방의회법등을 꼭 통과시켜 법률과 제도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회 의원님들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원내대표단과 함께 협력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성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더욱 더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도정 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이한기 도의원 발의 ‘동서간 교통망 건설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는 제3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한기 의원(진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연계 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을 지난 22일 채택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동서교통망구축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총 282.8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인데, 지난 2004년 이미 포항~대구 구간은 개통됐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2018년 착공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무주~성주~대구를 잇는 86.1km 구간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동서3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이 막힌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상생발전, 나아가 대중국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 확보 및 기반 확충이라는 대명제 아래 동서3축 고속도로의 가시성 구간인 전주~대구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북과 경북 유일의 철도망 연결 계획인 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유호상 기자

“현실 반영한 아동학대예방 정책 추진돼야”

이명연 도의원, 정부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회장·전주11)은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철교 계모 아동학대 사건, 2017년 전주 고종희양 살해 사건과 정인이 사건까지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문성 확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라,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폭력이라는 한계로 인해 개입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어, 두번째로 “조사차량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치료비 등의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 배정해야 된다”며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조사업무 관련 예산지원이 달리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예산을 국가가 직접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라,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폭력이라는 한계로 인해 개입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세번째로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사례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 이명연 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중함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우리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번째로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사례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서 이 위원장은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정이 현장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한 조속한 인력확충과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과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나기학 도의원 “지역주민 중심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 해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민 중심의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립 공정률이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로도는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이 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시설이나 관광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려는 경우, 도지가 용지나 용도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주민 주도의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도정 시책방향 설명하는 송하진 도지사 2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 판사 2명 탄핵소추 제안

민주·열린민주·정의 등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참여 ‘세월호 7시간 재판’ 유출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법원 판결로 재판정에서 공인된 임성근, 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법원 판결로 재판정에서 공인된 임성근, 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아닌 제안의 형식을 취한 이유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지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의결 시 비공개 비밀투표를 하는 국회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지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소추 의결 시 비공개 비밀투표를 하는 국회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지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법원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시스

민주,울상반기 중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상반기 중 조기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법원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시스

민중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을 금융위원회와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추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및 확산 ▲최고금리인하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공급 방안 상반기 발표 등이 포함됐다.

민중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을 금융위원회와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추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및 확산 ▲최고금리인하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공급 방안 상반기 발표 등이 포함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북도의회 의원별 5분 발언

“교대·전북대 입학전형 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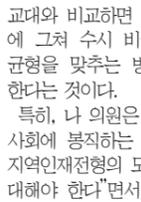
나인권 도의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지난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거점국립대 및 전주교대 입학전형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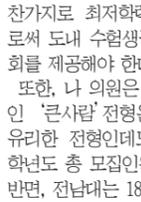
동안 지역인재 입학전형에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주교대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수시모집 비율을 확대했지만, 타지역 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쳐 수시 비율을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도내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청년 인구유출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교육청과 대학의 역할과 대책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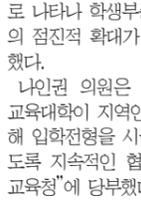
김명지 의원은 “당장 올해 예산만 봐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지원사업(5억원)이 전부가이고,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이 투입되는 전북형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보급 등 도내

전북 경제활동의 한 축을 이끌어야 할 10~20대 청년의 유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타지역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황의탁 의원은 “전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도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해 탐관위 부실로 인한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일부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으로 피해를 본 무주리조

실제 2020년도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도내 고교출신 학생은 1,758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43.5%에 그쳤다.



김명지 의원은 “당장 올해 예산만 봐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지원사업(5억원)이 전부가이고,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이 투입되는 전북형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보급 등 도내

이는 5년 전, 52% 수준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모습이다. 전주교대 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김명지 의원은 “당장 올해 예산만 봐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지원사업(5억원)이 전부가이고,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이 투입되는 전북형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보급 등 도내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교대의 도내 고교출신 입학생은 85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28.6% 수준에 그쳐 5년 전 43.3%에 달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김명지 의원은 “당장 올해 예산만 봐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지원사업(5억원)이 전부가이고,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이 투입되는 전북형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보급 등 도내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나 의원은 “전주교대와 전북대가 그

“도내 소상공 스마트상점 보급 확대를”

김명지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8)이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보급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스마트상점의 체계적인 보급사업을 위해 “일자리경제본부와 경제통상진흥원, 콘텐츠융합지원센터, 전북연구원 등 유관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및 단위사업 발굴·교육·홍보 및 시범사업 추진·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성과 확인·사업확산 등과 같은 일련의 체계적인 시책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은 “당장 올해 예산만 봐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지원사업(5억원)이 전부가이고,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이 투입되는 전북형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보급 등 도내

김명지 의원은 “당장 올해 예산만 봐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지원사업(5억원)이 전부가이고,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원이 투입되는 전북형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보급 등 도내

황의탁 도의원

전북도의회 황의탁(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의원은 전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도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 내·외 상가 등 도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탁 의원은 “지방재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황 의원은 “지난 해 탐관위 부실로 인한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일부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으로 피해를 본 무주리조

황 의원은 “지난 해 탐관위 부실로 인한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일부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으로 피해를 본 무주리조